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D-25 '준비 착착'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될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6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에서 이상덕 청장 주재로 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

점검 회의에서는 대회 주최기관인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등 공동주최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전반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상덕 청장은 금번 대회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 국내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대회로,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월 말 현재 △참가 등록 현황과 함께 숙박, 교통 등 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고, 개·폐막식,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계획도 점검했다.

재외동포청장 주재, 대회 추진상황 합동점검 회의 개최 기업전시관 준비 현황·안전·숙박·교통 대책 등 체크 김관영 도지사 "사소한 부분까지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특히 대회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업전시관의 준비 현황은 물론 참석자들을 위한 △안전대책도 다각적으로 확인했다.

9월 말 현재(25일 기준) 해외바이어는 75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대회 전까지 바이어를 포함해 셀러, 일반참관객 등 참가자 수는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업전시관은 10월 중순 완공 예정으로 기업전시관 내 전시부스는 330여 개가 마련되며, 일대일 비즈니스미팅을 신청한 기업도 400여 건에 달하는 등 참가 기업인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다.

이울러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계획을 비롯한 전북대학교와 가차역, 버스터미널, 숙박시설 등 주요 시설을 연계한 교통 대책과 참가자 숙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상덕 청장은 "계획대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에게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무엇보다 대회

에 참가하는 기업인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순간맞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재외동포들과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서, 재외동포청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인들과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도내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강화

전북자치도,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 체결

안전문화 확산·신기술 정보 교류 등 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품질 저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내 건설현장 합동 안전 점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및 컨설팅 제

공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건설안전 홍보 및 안전 문화 확산 △신기술 정보교류 등이 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더욱 발전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혁신엔진 부릉부릉... '일 혁신 프로젝트' 돌입

김관영 도지사 주재 '일 혁신 프로젝트' 보고회 개최

"불필요한 일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

전북자치도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혁신 시책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일(-) 혁신(X) 프로젝트'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전북도는 지난 '팀별 벤치마킹 시즌 1.2'를 통해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 왔다.

올해 '일(-) 혁신(X) 프로젝트'는 관행적이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혁신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동력 확보를 위해 아심차게 준비한 것으로 총 291건의 과제가 발굴되었으며, 이번 발굴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혁신적

인 도정 운영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12개 팀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19개 실·국·이 순차 보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팀장 전원이 보고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보고 방식을 각 과별 대표 과제 1건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고의 효율성도 높였다.

또한, 실·국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법정사무 추진, 부서 신설 등 팀별 특수성에 맞게 과제 제출 예외 사유를 두어 자료 제출의 유연성도 강화하였다.

특히, 팀장들이 주도했던 벤치마킹과 다르게 팀장과 팀원이 팀원이 되어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여 과제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러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혁신 시책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일(-) 혁신(X) 프로젝트'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북도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 간의 유대감도 한층 강화되었다.

첫 보고회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북자치도정

전시실 운영 개선',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 수립 개선', '지방 건설기술심의 대상 사업 축소' 등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과제들이 다수 제안됐다.

/이만호 기자

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다가오는 겨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

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9월 20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시작됐으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도 권고되고 있다.

예방접종은 도내 900여 개소의 지정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가까운 접종 가

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번 절기부터는 예방접종 편의를 위해 사전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모바일 및 PC)을 통해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예진표는 접종 당일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경우 각각 별도의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혁신도시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올해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현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시,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포함한 9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제10차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 이어 열 번째로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해 2024년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물품 우선구매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지자체 협조 사항과 다양한 홍보 주제들이 논의됐다.

2024년도 지역 발전 계획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으로 이날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재 채용 및 육성 △주민주원 및 지역 공헌 사업 △유관기관 협력 사업 △재해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 △기타 사업 등 6개 주요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적인 지역 발전 사업으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역대학 강사 출강 및 기관 벤치마킹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새만금 자율 운송 상용차 실증 지원 인프라 조성 △한국전기안전

공사의 중소기업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안심 성장 자금 'J-Box 펀드', △농촌진흥청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보급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의 미래농산업 CEO 과정 교육 △국립연금공단의 마을 자치 연구 확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북지역 도서 기증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 중소 중견 기업 상시 기술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우수 신제품 중자 생산·보급 등이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각 이전기관들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시 △이전 지역과 관련 없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에 합산된 우선구매 금액 매년 중복 계산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더 정확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전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울러,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지역 물품 우선구매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을 독려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 축제에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찬준 전북자치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25년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완주·전주 상생협력... 학산숲길 정비

흑석골~보광재-학산 약 1.9km 구간... 목계단 설치 등 새단장

전북의 명소, 학산 숲길이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력으로 다시 태어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선사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와 완주군 경계에 위치한 학산 일대(흑석골~보광재~학산) 약 1.9km 구간 숲길을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숲길 정비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상생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학산 일원의 보행이 어려운 구간과 노후된 시설을 공동으로 정비하는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통행이 불편한 곳의 잡관목이 제거됐다.

또한 목계단 설치와 함께 학산 정상에는 데크 전망대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또한 보광재 초입에 위치한 서화동 흑석골 일대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89억 원을 투입해 '산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방시대 4대 특구 간 협력 방안 모색

특구 연계 협력 추진단(TF) 구성, 실행 계획 구체화

글로벌대학30·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 방안 보고회를 열고 특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발전 특구, 글로벌대학30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방시대 4대 특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핵심 과제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에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으며, 교육 발전 특구로는 1차 시범지역인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에 이어 2차 시범지역으로 전주, 군산, 정읍 등이 선정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러한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구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회 발전 특구에는 신규 인력수요

급증과 함께 이전기업 근로자와 자녀 교육수요 증가 등 인력과 교육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기회 발전 특구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적기에 공급하는 등 특구 간 연계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 협력 추진단(TF)을 구성한다.

우선, '인재 육성과 취업, 정주 여건의 견고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발전 특구의 체계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관련된 글로벌대학30,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의 추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특구와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촌기본소득' 공동 연구 추진

전북연구원, 30일 민주연구원 등과 협약 체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만호)은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 전라남도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를 키우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

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체결된 공동연구 협약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개발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추진해 온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촌 활력과 지역 순환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